

감동없는 혁신안, '제 2의 천정배' 나온다

■ 새정치 전남·전북도당, '지역민심' 들어보니 친노패권 지속엔 호남 민심 지각변동 예고 야권재편·정권창출도 신당이 유일한 대안

새정치연합 전남도당과 전북도당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 22곳의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야권 신당에 비해 높은 곳은 전북에서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당은 아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광주 민심은 전남과 전북에 비해 야권 신당 지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 민심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전남과 전북에 비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서구 을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냉랭한 광주 민심을 반영했다.

당장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광주 국회의원의 지역구 8곳에서 야권 신당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는 '8대 0'의 스코어가 나올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정권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노 패권의 등을 돌려싸고 당내 내홍을 거듭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통해 야권을 재편, 정권재창출의 비전을 창출하라는 요구도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정권 창출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감동의 혁신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이반은 견잡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이 같은 흐름은 사실상 새정치연합에 대해 잠재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돌아선 호남 민심을 붙잡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남 민심이 요동치면서 야권 신당 창당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대로 된 정권 창출의 비전만 마련한

다면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야권 신당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세력화에서 점차 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행보도 이 같은 호남 민심의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야권 신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반작용이나 지역적 정서의 호남 신당보다는 정권 창출이 가능한 전국 정당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적 인프라 구축과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야권 신당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의 기저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재성 사무총장(왼쪽)과 김상곤 혁신위원장(오른쪽 앞) 및 혁신위원들이 문재인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野 혁신안, 당무위 격론 끝 통과

사무총장 폐지·당원소환제 등... 20일 중앙위 진통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사무총장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로써 혁신안은 '1차 관문'을 통과했으나, 계파 간 간극이 커 최종 결정기구인 오는 20일 중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 ▲부정부패 등으로 직

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당 혁신위가 마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역의원의 경우도 선거 120일 전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당비대남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다만, 최고위원직 폐지 등 일부 내용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혁신위의 판단에 따라 오는 9월 중앙위 처리를 목표로 단계를 밟아가기로 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으나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사퇴 공갈 발언'

으로 6개월 당직 정지를 당한 정정래 의원의 징계 재심사안이 기습 상정돼 통과돼 논란이 일었다.

이동욱 최고위원은 당무위가 열리자 "정 의원의 (윤리심판원의)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갑자기 재심사 요구안 상정을 요청했다. 요구안은 문 대표가 상정했고, 곧바로 거수투표가 이뤄져 찬성 19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됐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다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선 안 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태원·김승연·이상득·신재민 등 거론 野 "부정부패 인사 제외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면법에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면을 중심으로 5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

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실제 박 대통령은 작년 설 명절 특사 전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서민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된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재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라운지

김영록, 8월말까지 의정보고회 '희망 민생탐방'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인 '희망 민생탐방, 군민께 들겠습니다'를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의정보고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에서 숙박하는 군민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일반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지역발전 위해 지역주민과 진

솔하게 소통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중요하다"며 "'민생이 정책이 답이다'라는 말처럼 민생탐방의 결과를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16일 해남 송지면, 산이면을 시작으로, 28일 해남읍, 황산면 등 7월 중 해남군을 완료하고 8월부터 진도군, 완도군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영록

신정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며, 사무처 조직편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특조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유가족들과 피해자, 온 국민의 모범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제정과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 달성과 특조위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정훈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돈 · 빌려 주실 분!

- ▶ 3억원 이상
- ▶ 연 12% 확정 이자
- ▶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연 3억 순수의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단지
한마음연수원
담양댐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 금성 ————— 금곡 →